

[종합·해설]

대법관 후보 5명 제청

인선 배경과 전망

조직안정에 무게...정통 법관 중용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과 검찰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법조인들이다. 학계와 재야 법조계 추천 뒤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와 채이식 고대 법대 교수는 막판에 탈락, 최초의 학계 출신 대법관 탄생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5월 1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번 대법관 제청은 법원 조직의 안정에 무게를 둔 흐적이 역력하다.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제청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도 법원 내부에서는 여성 뿐이라기보다는 정통 법관 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파격 인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음 대법관 인선이 2009년 2월이나 있고 이번에 5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데도 재야·학계에서 한 명도 제청되지 않은 점 때문에 대법관 구성은 다양하게 하는 편은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고법 상고부 설치를 계기로 법관 위주로 대법관을 뽑는 대신 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인선을 하겠다고 공언한 기준의 방침이 이번 제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야·학계 출신 없어...‘대법원 다양화’는 실패
기수 등 안배...무더기 사퇴 등 후폭풍 없을 듯

◇인정·재판 실무 중시...보수화 줄이려 고심한 흔적=제청된 법조인 5명은 사법시험 14회(이홍훈) 1명, 15회(박일환) 1명, 17회(김능환·안대희) 2명, 18회(전수안) 1명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제청된 대법관 중 이들보다 사시 기수로 선배인 대법관은 김용담(11회), 양승태(12회) 대법관밖에 없다.

제청된 5명이 모두 대법관에 오르면 대법원은 이 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박시환 대법관을 빼고 모두 현직 법관이나 검찰에서 재직하면서 대법관에 임명된 사례로 기록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전문적 법률 지식’을 대법관 추천의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 이번 인선은 재판 실무와 법조 경륜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재야 법조인 대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

고 개혁 성향의 판결을 내린 이홍훈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제청한 것은 대법원이 보수쪽으로 기우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능환 울산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엄격하고 원칙적인 판결과 실무 처리로 평명이 나았다. 이런 면면을 볼 때 고위 법관들을 재정하되 실무형과 개혁성향의 인사를 적절히 안배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성과 실무력을 중시하다 보니 특정 학교 출신들이 대법관에 다수 임명된 것은 ‘육체’로 지적된다.

이홍훈·김능환 법원장과 안대희 고검장은 경기고·서울 법대 선배 배사이다. 박일환 법원장은 경북고·서울법대 출신이고, 전수안 법원장도 경기여고·서울법대 출신으로 김영란 대법관과 고교, 대학 선

후배 사이다.

이들이 대법관이 되면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중 경기고 출신이 4명이고, 서울법대는 12명이다. 비서울대 출신은 김지현 대법관이 유일하다.

◇무더기 사퇴 등 후폭풍 없을 듯=대법관 기수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14~18회가 고르게 포함돼 21회 까지 내려갔던 지난해 파격 인사 때문에 빚어진 법관들의 무더기 사퇴 등 법원 내부의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시 14회 이상의 고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거취 문제가 불투명하다.

올 8·9월 윤영철 현법재판소장 등 5명의 현법재판관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도 고위 법관 인사의 번수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대법관 인선 결과를 볼 때 파격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한편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요구가 있는 뒤 20일 이내 하도록 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자연히 대법원 업무에 광백이 불가피하다.

강신호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다음달 10일자로 퇴임할 때까지 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8명이 재판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법관 제청자 프로필

약자 옹호 개혁적 판결 많아 이홍훈



법원 내 점통 엘리트 법관이면서도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법관 입관 이후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정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왔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개혁성향의 판결을 많이 내렸다.

꼼꼼한 법리 판단을 토대로 한 주목받는 판결도 많다. 일조권이 침해된 주민들에게 건설사가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해 환경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고법부장판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현수막 설치를 불허한 자자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전북 고장(60·사시 14회) ▲경기고·서울법대 ▲서울민사지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원칙 입각한 판결 ‘정통 법관’ 박일환



원칙에 입각한 판결과 꼼꼼한 실무처리 능력 등을 토대로 법원 내 ‘정통 법관’으로 인정받아왔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대구·경북(TK) 출신은 퇴임하는 강신숙 대법관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지역 안배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채권주권행위를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불법 채권주권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학사경고를 세 번 받은 대학생이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고 재적시킨 것은 지나치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경북 군위(55·사시 15회) ▲경북고·서울법대 ▲서울민사·형사지법판사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두번째 여성 대법관 제청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여성 등 약자 계층 ‘옹호 판결’
“국민·국가·사회 나침반 역할”

국내 사법사상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53)은 7일 “판사로 첫 부임된 후 가진 초심대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 행복하고 고맙다”고 밝혔다.

전 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판결 중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 지위에 걸 맞게 국민의 생활과 국가,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78년 입관 후 만 27년9개월 간 재판업무만 맡아온 ‘정통법관’인 전 법원장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법부 내에서 진보적 면모를 갖추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 법원장은 “아직까지도 이른바 ‘소수자 계급’으로 남아 있는 여성과 그의 소수 및 약자 계층을 위해 재판관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겠다”고 밝혔다.

끌 으로 그는 “그동안 막연한 동경과 존경심, 경외감이 있던 광주와 인연을 맺어 고맙다”면서 “그동안 저에게 보내준 광주시민들의 정(情)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광주에 관련된 지원 여론 조성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석에서는 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소탈한 면모도 있다. 의사인 남편 임상혁(58)씨와 2남.

▲부산(사시 18회) ▲경기고·서울대 법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자금 수사 지휘 ‘특수통’ 안대희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경검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조직의 위상을 세우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정상명 검찰총장 등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안 후보자는 국적 사건 수사를 도맡아 해 ‘특수통’ 검사의 대명사로 불린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사건, 설계감리 비리 등을 처리했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때는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

▲경남 함안(51·사시 17회) ▲대검 중수부 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민·형사, 가사 등 이론·실무 정통 김능환



민·형사, 가사·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석 판사 시절이던 1982년에는 연구모임을 만든 협회 고교 교사 등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서 당시 유례없이 피고인 6명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재산이 서울 송파구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외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 내 대표적 ‘청빈 법관’으로 통한다. 김문경 여사와 사이에 2남.

▲충북 진천(사시 17회) ▲경기고·서울법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열린우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근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의원총회 분열 수습?

비대위 구성 놓고
계파간 갈등 예고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계파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던 열린우리당이 7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 간신히 내부 분열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계파 갈등은 여전히 잡복된 상태에서 추후 비대위원장 선임 및 비대위 구성 등을 놓고 실용 대책 마련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열린 의원총회는 선거 참패에 따른 침통함,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 상대 계파에 대한 적의 등이 뒤엉켜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근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선거에 패해지 만 여전히 14석을 가진 여당이고 원내 1당”이라고 강조하고 “여전히 우리 책임은 무한대이고 할일이 대선”이라며 드러냈지만 좀처럼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 선임을 전직 당의장 등으로 구성된 8인 인선위에서 정하기로 했으나 김근태 의원의 비대위원장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김근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장을 맡는 것에 대한 실용과 진영에서의 반감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 해도 상당한 갈등이 예고된다. 특히 비대위 권한이 통상적인 최고위원단보다도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대위 참여 폭과 구성 방식을 놓고 계파간 협력루기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관련 ‘전례’를 감안, 계파 간, 지역간 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도부의 중립성 강화 차원에서 중진의원들로만 포진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예정인 의원 위원회에서 실용과 개혁과의 한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he advertisement features several small images of apartmen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 Top left: 499,000
- Middle left: 1,049,000, 1,059,000, 1,079,000
- Middle right: 1,049,000, 1,059,000, 1,079,000
- Bottom left: 1,049,000, 1,059,000, 1,079,000
- Bottom right: 1,049,000, 1,059,000, 1,079,000